



북한과 조총련의 정치·경제적 상관성

진회관

동국대학교 강사, 정치학

북한과 조총련의 관계는 매우 역사깊은 것이며, 최근 북한의 경제난이 조총련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조총련은 과거 북한의 지원에 대한 고마움을 상기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 사망 이후 조총련은 '이탈'과 조직 약화의 경향을 띠고 있어 북한과의 관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변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는 조총련에게 누적되어온 경제적 부담, 김정일로의 권력 승계에 대한 반발 존재, 최근 재일조선인 1세의 고령화와 3.4세의 북한의 '호소'에 대한 이해 곤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조총련이 북한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공민'의 신분으로 정치적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것, 개방이 본격화되고 많은 합영·합작사업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그 경제적 관계의 단절이 어렵다는 것, 많은 수의 교포들이 조총련계 기업에 몸담고 있는 점, '민족 학교'와 민족 교육의 운영 등이 관계 변화 제약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과 조총련 관계에 큰 변화라도 일어나고 있는 듯한 보도는 북한과 조총련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난점을 제공할 소지가 다분하다. 최근 조총련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결력이 민단보다 훨씬 강하다는 점에서 향후 허종만체제의 향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고 상호 화해 및 교류 협력을 실현함으로써, 재일교포 사회의 분단과 생활의 장애를 초래하는 이데올로기적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조총련과 민단의 공동 행사 개최 등 화해 분위기가 남북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제의 제기

재 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는 1955년 5월 東京에서 지금의 의장인 한덕수를 중심으로 하여 좌익 성향을 띤 재일조선인 단체로 결성되었다. 결성 당시부터 기존의 일본 공산당과의 관계를 축소시키고 북한과의 연계를 강화시키면서 태동하게 된 단체인 만큼, 북한과 매우 밀접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오늘날까지도 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북한은 이미 50년대 초부터 재일교포들에게 물심 양면의 지원을 해왔고 이것이 밀접한 관계를 만든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50~60년대에 재일교포의 대부분은 일본 사회의 '하층민'에 해당되었고 정치적으로 역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관심과 지원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었다. 또한 조총련은 북한 공민의 자격으로 1967년 4기 최고인민회의부터 현재까지 대의원 7 명을 참석시키고 있는 사실, 그리고

80년대 이후 합영사업의 참여 기업 가운데 60% 이상이 조총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조총련은 북한의 외곽 단체로서 같은 범주에 속해 있는 정치·경제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의 사망 이후 조총련과 북한의 관계가 매우 취약해지고 조총련 조직이 와해되고 있다는 여러 보도를 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전면 부정하기 어려운 점은 1990년 구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직후 국적 변동자('조선'에서 '한국' 및 기타 국가로 변경)와 김일성 사망 직후의 국적 변동자 수치가 비슷하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일성 사망에 대한 파장이 적지 않았다.

또 다른 한편, 과연 조총련 조직이 '와해' 국면에 있는지 아니면 부분적인 현상인지 밝혀야 할 것이며, 김일성 사망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는 점 역시 살펴보았을 때 비로소 조총련의 현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재일교포들이 조총련을 이탈했다고 해서 반드시 '민단' (한국측)으로 적을 바꾸지 않는다는 점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본 고에서는 북한과 조총련의 관계를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역사적인 이해를 통해 조명함으로써 현실 쟁점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조총련 결성 초기 북한과 밀접해지는 과정과 북한의 정치적·경제적

지원 그리고 조총련의 대북 지원 시작과 최고 인민위원회 진출, 합영, 합작 등 일련의 쟁점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조총련이 처한 위치와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전망해보고자 한다.

북한과 조총련의 정치적 상관성

조총련 결성과 북한의 지원

해방 직전의 통계에 의하면,¹⁾ 재일교포는 240만 명 가량에 달하였고, 해방이 되자 여러 경로를 거쳐 180만 명 가량이 귀국하였으며 나머지 60만 명 가량이 잔류하게 되었다. 귀국 행렬은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해 사실상 중단되었다. 당시 1953년 3월 통계에서 재일교포의 출신지별로 구성을 보면 경상도가 가장 많은 61%, 제주도 12%, 전라남도 11% 등으로 남한 출신이 98%를 차지하고, 이러한 통계²⁾는 1세나 아니면 2~3세나 이의에는 최근까지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당시 1953년 국적별 분포를 보면 출신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조선'이 76.4%이고 '한국'이 23.6%로서 출신지와는 역으로 조

1) 전준, 「조총련 연구」 1권,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2, p. 365.

2) 일본법무성 통계 자료를 민관식, 「재일본한국인」, 아세아정책연구원, 1990에서 재인용.

사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³⁾에서 기인한 것이겠지만, 재일교포 사회가 친북한적 성향으로 되기 쉬운 형식적 요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조총련이 결성되기까지 ‘조련’(재일본조선인연맹), ‘조방위’(조국방위위원회), ‘민전’(재일조선민주통일전선)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일본 공산당의 지도를 받고 있었다는 점은 북한과 밀접하게 되는 높은 개연성을 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방 후 1945년 10월에 결성된 조련은 金天海 등 일본 공산당 朝鮮人部 간부의 지도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조선독립운동과 일본 공산당과의 관계가 해방 이전부터 깊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 공산당의 강령에도 ‘일본의 모든’ 식민지의 완전 독립’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일본의 혁명과 조선의 독립은 하나의 논리인 셈이다.⁴⁾ 조련은 ‘폭력적’ 성향으로 인해 1949년 9월 일본 법무부의 기습적인 「團體等規制令」에 의해 해산되었지만,⁵⁾ 한국전쟁 중에 일본 공산당으로 하여금 조선인부가 民族對策部(이하 민대부)로 재조직되면서 1950년 10월 조국방위위원회가 결

성되었다. 이 단체의 성격과 행동 양식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을 찾을 수 없지만 기관지인 「새조선」의 내용⁶⁾에서 볼 때, 무력 저항적이며 조국 방위와 전쟁 반대 그리고 일본 민주 세력(일본 공산당)과 제휴하여 “일본에서의 제국주의 세력과 반동 세력을 타도·분쇄한다”고 하여 일본 공산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⁷⁾

그러나 민대부, 조방위의 활동이 과거 조련의 간부들의 전반적인 동의에 의한 것은 틀림 없으나 부분적으로는 일본 공산당의 지령에 복종하는 것에 반발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1951년 1월 민전의 결성 이후 커다란 쟁점으로 부각한다는 점에서 드러나게 된다. 강령에는 “우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사수한다”고 하여 그 성격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같은해 12월 민전 2차 대회에서는 민전 내의 민대부와 북한 지지 세력인 ‘非민대부’ 간의 마찰이 빚어지게 되었다. 이 결과 북한 지지 입장은 민대부의 반대로 인해 制裁되었다.

그러나 1954년 제네바회의에서의 북한 외상 남일의 성명⁸⁾에 대한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던 구소련과 중국의 지지는 재일조선인운동에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 이듬해 3월 민전

3) 우선 재일교포들은 ‘조선인’이라는 관성이 작용했을 것이다. 둘째, 당시 교포 사회에서는 국적 문제보다 ‘생활’의 문제가 더욱 시급한 문제였다.

4) 若槻泰雄, 「韓國・朝鮮と日本人」, 原書房, 1993, pp. 196~197.

5) 전준, 앞의 책, p. 596.

6) 「새조선」 No.25, 1951. 5.10, 朴慶植 編, 「解放後の在日朝鮮人運動 II」, 朝鮮問題資料叢書 第十卷, アシア問題研究所, 1983, p. 11.

7) 和田春樹, 「朝鮮戦争」, 岩波書店, 1995, p. 128.

19차 중앙위원회에서 한덕수의 연설과 민전 지도부에 대한 비판으로 전환기를 맞이하였고, 같은해 5월 민전 6차 임시대회가 개최되어 민대부 김충권의 자기 비판과 민전 해산 선언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25일 조총련 결성대회가 개최된 것이다.

같은해 7월, 일본 공산당은 민대부와 조국방위조직의 해산을 결정하였고, 조총련 2차 대회에서 민대부의 수장인 김충권이 제명되면서 조총련 내의 민대부 세력은 힘을 잃게 되었다. 더욱이 1957년 4월 북한으로부터 최초의 교육 원조비 1억 2,000여만 엔이 도착하고, 이후 평양에서 열린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2차 대회에서 한덕수가 중앙위원단에, 그리고 이심철, 황봉구가 중앙위원에 선출되었으며 '학습조'를 조직하여 조총련 내부의 사상적 해계모니를 통일함으로써, 1958년 이후 일본 공산당의 영향력은 '인맥 관계'로만 남게 되었다.

조총련의 제도적 편입과 유일 사상화

조총련은 창립대회에서 북한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 가맹한다는 내용을 규약에서 공식 표명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정치사전

은 조총련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로⁸⁾ 규정하고 당과 수령의 영도를 받는 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김일성은 1956년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재일교포들의 권리 옹호를 위해 정치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귀국 사업(복송 사업) 준비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북한과 조총련을 연결짓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조총련의 최고인민회의 진출과 유일 사상화를 들 수 있다.

우선, 조총련과 북한과의 밀접성은 고위 간부들의 최고인민회의 참가 사실에서 명확해 지는데, 이것은 남한과 민단과의 관계와 크게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조총련은 1967년 12월 제4기 최고인민회의에 처음으로 대의원에 선출되었으며, 매 기마다 7명 가량이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하고 있다.

1967년 당시 조총련이 최고인민회의에 진출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겠으나, 남한과 민단과의 관계를 비교할 때 큰 차이점에 틀림없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북한과 조총련은 매우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가 국가 기관이라는 점에서 조총련은 북한의 영도체계 내의 한 부분으로서 수령의 영도를 받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조총련은 조선로동당의 외곽 단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북한이 말하는 '사

8) 남일, "조선 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제네바회의에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사업에 관한 보고",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I, 국토통일원, 1988, pp. 685~694 참조.

9)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1085.

회정치적 생명체'의 유기적 관계로 설정된 것으로서 대단히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조총련은 북한 사회의 작동 논리인 주체사상 교양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왔으며, 북한과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규정되어왔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995년 5월 25일 조총련 창립 40주년 기념대회에 보낸 김정일의 서한에서도 중요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김정일은 조총련의 주체사상 교양과 '애국활동'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¹⁰⁾ 조총련의 주체사상 교양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은 이미 1967년 최고인민회의에서부터 참석자들에 의해 강조되어온 사안이다.

조총련에서 사상 문제가 심도있게 다루어진 것은 1967년 5월 8차 전체대회에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김일성 저작에 대한 학습과 토론이 중요하게 지적되었고 모든 사업총화보고의 서두로 등장하였다.¹¹⁾ 이는 북한의 사상 사업이 시작된 시점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1968년에는 '총련 일군들의 사상 무장과 단결'을 강조하고 '100 일간 혁신 운동'을 통해 사상 교양을 강화해나갔다. 그리고 다음해인 1969년에는 白峯의 「金日成傳」 전 3권이 일본어로 번역 출간되고 未來社에서는 영문판으로 출간되어 학습에 쓰여졌고, 이 일로 1970년 2월 당시 조총련 부의장이었

던 지금의 북한 부주석 김병식이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받았다.

이러한 사상 교양은 '5호담당선전원'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행정 구역, 학교, 직장, 단체 단위로 구성된 조총련의 세포 조직인 분회(당시 약 2,000여 개)에서 소속자의 사상 교육을 담당하는 자들이다.

조총련의 유일 사상화 과정은 80년대 들어 김정일에 대한 충실성 교양으로 나타나 변화하였고, 최근 김일성 사망 이후 배병두 조총련 부의장은 북한의 공화국 창건 46돌 축하단 단장으로 참석하여 한 연설에서 김정일의 영도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김정일에게 단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¹²⁾ 그리고 지난 1995년 5월 25일 조총련 창립 40주년 기념대회에서도 '대를 이어 충성하는' 수령과 후계자의 구도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¹³⁾

이러한 특징들에서 조총련이 북한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조총련은 해외 교포 조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파견 조직'이라고 할 만큼 최소한 조총련 지도부는 북한의 유일지도체에 철저히 복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조선신보」, 1995. 5.25.

11) 「조선신보」, 1967. 11.11; 전주, 앞의 책, p. 406에서 재인용.

12) 「로동신문」, 1994. 9.10.

13) 「조선신보」, 1995. 5.25.

북한과 조총련의 경제적 상관성

해방 이후 북한의 對조총련 지원

북한의 對조총련 경제적 지원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교육 원조비를 들 수 있다. 1957년 4월부터 송금하기 시작한 교육 원조비는 최근까지 130여 차례 걸쳐 430억 엔에 이르고 있다.

교육 원조비가 조총련 사회에 미친 영향은 대단한 것이었다. 우선 교포와 그 자녀들에게 우리말과 역사를 가르칠 수 있었고, 이는 재일교포 사회에 적지 않은 교감을 불러 일으켰다. 우리말과 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해준 북한의 교육 원조비 지원은 일본 공산당에서 벗어나 북한을 취할 것을 주장하며, 민전 해산에 앞섰던 한덕수를 비롯한 '非민대파'가 조총련 내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북한을 지지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특히, 조총련 대중들에게 북한의 영향력이 깊이 파고들게 되었다는 사실이 오늘날까지 북한과 밀접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¹⁴⁾

오늘날 북한의 경제 사정 악화로 그 지원금액수가 대단히 축소되었지만, 60년대와 70년대의 10억~20억 엔이라는 지원금 규모는

대단한 것이었다.

김일성은 1970년 조총련 결성 15주년 기념 축하문과¹⁵⁾ 1972년 재일교포 방문단에게 한담화¹⁶⁾를 통해서 북한이 보내는 교육 원조금의 목표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 첫째, 조선 사람으로서 조선말과 글을 배워야 한다는 것 둘째, 조선 사람으로서 북한을 강력히 옹호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1957년에 2억여 엔으로 시작하여 60년대에는 매년 10억 엔, 1974년에는 갑자기 2배 이상인 37억 엔으로 증가하였다가, 1976년부터는 다시 20억 엔으로 낮춰졌고 1982년도부터는 10억 엔으로 줄어들었다.¹⁷⁾

이는 교육 원조비 규모가 북한의 정치·경제 상황과 밀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974년은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표명된 시점이면서 또한 한국의 모국 방문단 사업으로 인해 조총련의 조직 이탈 사태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은 조총련 조직을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찍이 재일교포들의 교육열은 대단하여

14) 현재 민단 교포들 가운데에도 많은 수가 조총련 학교를 다닌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1961년 이후 한국에서도 교사를 파견하였지만 그 규모와 지원 내용은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다.

15) 「김일성저작집」 25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127.

16) 위의 책, 27권, p. 158.

17) 世界政經調査會編, 「韓國·北朝鮮資料集」 1969년 판, 1969, pp. 690~691의 도표와 「내외통신」 종합판 24호, 1983, p. 482의 도표, 그리고 「내외통신」 종합판 25-53호와 「로동신문」 참조.

1948년도에는 크고 작은 학교가 604 개교에 학생 수는 5만 8,100 명에 이르렀다.¹⁸⁾ 귀국 등으로 그 수는 줄어들었지만 조총련 운영 학교는 1955년에 19 개 지역에 202 개교, 학생 수 2만 2,177 명이며 1956년 4월에는 壬子 조선인고교의 假校舍에서 83 명의 신입생으로 조선대학교가 출발했다. 그후 1958년 북한 교육 원조비의 송금으로 새롭게 교사를 짓게 되었고 초급학교에서 대학까지 종합적인 교육체계를 갖게 되었다.

현재 민단체 학교는 3 개교인 데 반해, 조총련계 학교는 1992년 현재 150 개교이며 유아반을 포함하면 216 개교에 이른다.¹⁹⁾ 이러한 사실은 민단체 학생 가운데 많은 수가 일본 학교에 다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은 주목할 일이다.

조총련계 동포들이 김일성 사망이라는 급변하게 된 환경 속에서도 총련이라는 조직에 애착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자녀들에게 우리말을 배우게 할 수 있는 민족 학교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²⁰⁾는 사실은 새겨줘야 할 일이다.

조총련의 대북 지원과 합영·합작사업

지난 1994년도는 조총련의 '대북 송금' 문제로 뜻밖에도 재일교포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일본의 현대코리아연구소 소장인 사토 가쓰미(佐藤勝己)의 연 '600억 엔 송금설' 발표와 일본 정부의 대북 달러 송금 증지 조치 등이 북한 핵개발과 연계되어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킨 것이다.

또한 북한이 1984년에 추진한 합영사업이 부진하자 최근 법의 개정과 신규 법규들의 제정을 통해 경제난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총련 부의장이면서 북한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인 전연식의 사망 이후, 그의 동생인 전진식이 일본 TBS TV의 인터뷰에서 제기한 북한과의 합영·합작의 문제점 지적으로 조총련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큰 관심을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북한과 조총련의 '대북 송금' 과 '합영·합작' 이라는 두 가지 경제 관계를 북한은 '애국 사업'으로 표현해왔다. 「로동신문」은 1990년 5월 25일자 조총련 결성 35주년 기념 사설에서 '애국 활동'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 1986년 조총련 제14차 전체대회에 보낸 김일성의 축하문²¹⁾에서도 '애국 사업'의 핵심이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1995년 5월 25일 조총련 창립 40주년에 보낸 김정일의 서한에서도 애국 사업의 중요성

18) 若槻泰雄, 앞의 책, p. 221.

19) 朴三石, 「問われる朝鮮學校處遇」, 朝鮮青年社, 1992, p. 13.

20) 「한계레신문」, 1995. 4. 4.

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 '애국 사업'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그 성격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 '애국'과 관련된 담화와 사업들은 1967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²²⁾에 대한 교양 사업이 북한과 조총련에 확산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70년대까지 '애국 사업'의 내용은 '조국 통일'과 '사회주의 조국 건설'이라는 내용에 초점을 두면서 통일과 건설이라는 대명제를 위한 사업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의미는 '나라 살림'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것이 80년대부터는 통일에 대해서 물론 언급하고 있지만, 주로 사회주의 건설과 관련하여 경제 문제에 강조점을 두고 있으며 조총련의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조총련 상공인들이 '총련 애국 사업의 주력군'이며 분회위원과 선전원들은 상공인들이 "분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애국영예기쟁취운동'에 역점을 두라고 하는 김일성의 축전 내용²³⁾에서 볼 때, 조총련 경

제인들이 북한의 경제난 타개와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조총련 결성 40주년 대회에 맞춰 김정일이 보낸 서한에서도²⁴⁾ 확인됨으로써, 김일성 사후에도 조총련의 과거의 역할은 지속되고 있으며 재일동포 상공인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애국 사업'을 통일 문제보다는 경제 관계에 비중을 두어왔다. 1983년 4월 최고인민회의 7기 2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애국 공장' 건설이 언급되고,²⁵⁾ 1984년 7기 3차와 7기 4차 회의에서는 교육 원조비가 교포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애국 사업'을 크게 고무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어, 마치 애국 사업이 교육 원조비의 대가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특히, 7기 2차 회의에서는 경공업 공장이 사회주의 건설에 큰 힘이 된다고 언급하면서 경공업 활성화와 이에 대한 총련 상공인들의 역할 재고를 강조하였다.²⁶⁾

21) 「김일성저작집」 40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 177.

22)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1961년 조선로동당 4차 대회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용어로서 '부르주아 민족주의'와 대비되는 북한의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이다. 1966년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최성욱의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가 단행본으로 발간되면서 그 교양 사업이 확대되었고 이 시점에서 이 용어가 체계화된 것이다.

23)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제16차 분회위원 선전원대 회에 보낸 축전(1987. 10.17)", 「김일성저작집」 40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 364.

24) 「조선신보」, 1995. 5.25.

25) 애국 공장의 시초는 1967년 기증한 애국 복재 가공 공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식 회의록에 언급된 것은 80년대가 처음이다.

26)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Ⅳ, 앞의 책, p. 530, 610, 667.

이러한 경제 문제와 관련된 '애국 사업'의 대표적인 표현 방식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즉, 대북 송금과 합영·합작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북 송금의 경우 사토가 말한 연 600억 엔 송금설은 다분히 도식적인 단순 계산에 의지하고 있어 그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²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밝혀진 조총련의 북한에 대한 송금은 여러 가지 형태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조총련의 조직적인 대북 송금은 1972년 김일성의 60회 생일에 맞춰 5억 엔 송금을 시작으로 하여 매년 북한의 행사에 맞춰 모금 운동을 벌여 북한으로 송금해왔다. 1982년에는 조총련이 '공장현납운동'을 벌여 평양에 애국 공장을 지었으며²⁸⁾ 김일성의 70회 생일에 맞춰 50억 엔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시점이 북한의 교육 원조비에 비해 대북 송금 액수가 더 많아지는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1986년도부터는 교육 원조비가 10억 엔을 밑돌았고 1987년도 3억 엔, 1988년도 5억 엔으로 극도로 하향된 것으로 봐서도 이전과 달리 80년대부터는 오히려 북한이 조총련의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북한과 재일조총련계와의 합영기업은 110여 건의 합영 계약이 실현되어 60 개소의 합영사업이 조업하고 있다고 하는데,²⁹⁾ 1992년도 이후에는 재일조총련계와 북한과의 합영 건수가 급속히 감소하여 1993년부터 1994년 초까지의 기간 동안 3 건에 불과할 정도이다. 이는 조총련 기업과의 합영·합작 설립 건수가 1986년부터 1992년까지 총 70여 건으로 연평균 10여 건이었다는 데 비하면 대단히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총련 기업과의 합영·합작은 북한에게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이 1984년에 합영법을 제정하여 자본주의 국가들과도 교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조총련 기업과의 합영이 전체의 60%를 웃돌았으며 이외의 다른 국가들과의 합영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최근 1991년 이후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와 조항들에 대한 개정과 제정을 통해서 개방 의지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³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총련 기업들과의 합영 건수의 감소는 북한과 조총련 상공인들의 경제 관계가 반드시 순탄치는 않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27) 미야쓰카 도시오, "설득력 약한 '600억 엔 송금설' - 재일동포들의 대북 투자 현황과 의미", 「통일한국」, 1994. 5, pp. 37~41 참조.
28) 「최고인민회의자료집」Ⅳ, 앞의 책, p. 530.

29) 「조선상공신문」(1992. 9. 1)을 미야쓰카 도시오, 앞의 글, p. 40에서 재인용 참조.
30) 室岡鐵夫, "北朝鮮の經濟不振と政策展開", 「海外事情」, 拓殖大學海外事情研究所, 1993. 10, p. 17.

앞서 언급한 1986년 설립된 모란봉합영회사 사장인 전진식이 일본 TBS TV 인터뷰에서 언급한 문제점뿐만 아니라, 원유 부족으로 인해 공장 가동이 어렵고 조업 중단이 빈번하게 되는 등 기간 산업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서 조총련 상공인들의 대북 투자 역시 순조롭지 못한 것이다.

전진식의 경우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첫째, 편의주의 문제로서 북한이 무역 관행을 무시한 채 거래 이익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1989년 당시 '조선국영합영총회사'의 제4차 이사회에서 조총련 상공인측이 북한측 담당자인 김달현에게 강력히 항의한 사건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둘째, 경직성을 들고 있는데, 북한 통관 절차의 지나친 검문 검색과 뇌물 수수 관행을 합영사업의 큰 장애 요인으로 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식의 인터뷰 내용에서는 북한을 적대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그는 회사 운영(합영)에서 순익을 내야 하고 손해볼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경제인으로서의 바램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조총련의 이합과 북한과의 관계 전망

김일성의 사망과 조총련의 동요

현재 재일교포 68만 명 가운데 조총련은 25만 명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1955년 조

총련 결성 당시 75%가 조총련이었고, 한국과의 국적 비율은 한일회담(1965) 이후인 1969년에 가서 역전되었으며 계속 소폭으로 감소해왔다. 물론 현재의 감소폭은 60년대와 비교할 때 매우 작은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 사망과 핵문제로 세계의 비판 여론이 고조된 1994년 한 해 동안 6,200명이 국적을 변동하였다. 이는 동구와 구소련 등 공산권 붕괴 다음해인 1990년의 6,600명 다음으로 많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교포 2,3세대들은 물론, 조총련 결성 초기부터 생활고에 시달리는 '재일조선인'들에게 자녀 교육 지원금을 보내준 김일성의 '공로를 잊지 못하는' 교포 1세대들조차 "조국에 대한 충성은 김일성 한 사람으로 족하다"며 부자 세습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북한이 일본에게 쌀을 빌리면서 불만은 증폭되고 있다고 한다. 당시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일본과 북한의 쌀협상 과정은 물론 결과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북한과 조총련 중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적 변동자는 증가하고 있다. 상공인들의 현금 기피도 심화되고 있으며 상공회 조직들이 폐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김정일은 지난해인 1995년 5월 25일 조총련 결성 40주년에 보낸 축하 서한에서는 몇가지 사안을 특히 강조하였다.

첫째, 주체사상과 '애국애족사상'으로 무

장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총련 사상 사업의 기본 임부는 모든 일꾼들과 동포들이 주체의 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고 참다운 애국애족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둘째, 상공인들의 역할 강조이다. “... 재일 동포 상공인들은 총련의 기본 근주이며 재일 조선인운동의 주력군입니다. ... 총련은 동포 상공인들을 믿고 그들에 의지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을 발전시키며, 모든 동포 상인들이 높은 애국심과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애국 사업에 헌신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고 하여 조총련 상공인들의 대북 지원 활동을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다.

셋째, 민족 교육의 중요성을 강도 높게 언급하고 있는 점이다. 조총련의 결속을 위해 중요한 사업은 사상 교양에 있지만 중요한 연결 고리는 민족 교육에 있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김정일의 축하 서한에서 조총련 상공인들을 ‘주력군’으로 표현한 사실에서 최근 조총련의 위상을 직감할 수 있을 것이다. 조총련의 경제 관계가 북한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더욱이 조총련 중앙의 3대 요인 가운데 한 사람인 이진규 제1부위원장이 지난해 9월 사망하고, 의장인 한덕수가 지난해 4월 북한으로 ‘영구 귀국’하였고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책임부위원장인 허종만의 입지가 강화될 것임

에 틀림없다. 허종만은 일찍이 김정일의 심복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로서 북한의 ‘지도’를 수행하는 데 누구보다도 열성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북한과 조총련 모두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고 김일성과 한덕수 체제에서 김정일과 허종만 체제로 자연스럽게 이동하였으며, 지난 1993년 12월 조총련 부의장 출신인 김병식 사회민주당 위원장의 부주석 발탁 등으로 인해 북한과 조총련은 지도급 수준에서 매우 강한 유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총련 지도부가 조총련 대중을 어떻게 결속하고 지도하는가 하는 문제는 앞서 지적한 다각적인 문제들로 인해 과제로 남아 있다.

관계 변화의 촉진 요인과 제약 요인

최근 나타난 조총련의 ‘이탈’ 현상은 단순 평가될 수 없는 것이다. 그 저변에는 누적되어온 문제, 시대의 변화, 촉진 요인 등 다양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변화 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억제하는 요인들 역시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변화 요인들을 살펴보면 첫째, 조총련에게 누적되어온 경제적 부담을 들 수 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조총련 상공인들에게 주

는 하층이 매우 크며, 또한 대중들에게 별이고 있는 대북 지원 명목의 보급 운동이 부담으로 자리하고 있어 '이탈'의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김정일로의 부자 승계에 대한 반발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김일성의 사망과도 관련되는 것인데, 유일사상체제와 후계 승계에 대한 사상 교양이 이미 60년대 후반부터 시도되었지만 모든 조총련 대중을 설득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셋째, 최근 재일조선인 1세는 고령화되어 있고, 3,4세까지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즉, 교포 3,4세까지 북한(조국)의 '호소'를 이해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1957년 이후 출생을 신세대로 규정하는 일본 사회에서 교포 3,4세의 '이탈'은 '자연 현상'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변화 억제 요인들 역시 공존하고 있다. 첫째, 조총련은 북한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공민'의 신분으로 정치적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즉, 조총련 하부 대중의 동요와 변화는 일정한 폭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최소한 지도부와 조총련 구조 틀의 와해 예측은 현실 가능성이 매우 적다.

둘째, 북한과 조총련 기업의 합병·합작사업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지만 북한의 기업 논리에 대한 몰이해와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발생한 사건들로서, 개방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합작 초기의 문제점들이라

고 볼 수 있으며, 또한 110여 건의 합병·합작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했을 때 그 경제적 관계를 쉽게 단절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한반도 주변에서 북한은 투자 가치(질 높은 노동력, 투자세율 저가 등)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뒷받침한다.

셋째, 자영 업자와 일용 노무자를 제외한 많은 수의 교포들이 조총련계 기업에 몸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 전역에 걸쳐 있는 조총련계 신용조합과 빠징고 산업 그리고 조총련 사무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포들에게 '이탈'은 곧 실직을 의미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일본 사회에서 교포들에 대한 직장에서의 차별이 존재하고 교포 2,3세들의 활로가 협소하다는 점에서도 기인한다.

넷째, '민족 학교'와 민족 교육의 운영을 들 수 있다. 교포들이 자녀들에게 우리말과 글을 가르치려는 교육열이 대단히 높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일성 사망 이후에도 조총련 교육 기관의 운영과 활동은 조총련 조직에 애착을 갖도록 하는 동력이 되고 있고, 저변의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도 작용하고 있다.

특히, 조총련에서 '이탈'한 교포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만은 않는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68만 명 교포 가운데 타국 국적(일본 및 중립) 취득자가 8

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추산되고 있다. 더구나 재일교포의 98%가 남한(주로 경상, 제주, 전라)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이 조총련 이탈 이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조총련의 변화하는 모습에는 긍정적인 면 또한 존재하고 있다. 최근 재일교포 사회에서 조총련과 민단의 관계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이다. '지방 향우회'(경북, 제주)에 양측이 공동 참여한다든가 일부 지역 상공인들이 정기적인 '골프 모임'을 갖거나 '송년회'를 공동 개최하기도 한다. 그리고 조총련 상공회에서 민단을 포함한 모든 재일교포들을 대상으로 상권과 세금 혜택을 보장해주도록 자치 정부와 협의 하에 실행에 옮기고 있다.

맺음말

조총련은 북한에 대한 과거의 '고마움'과 현재의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으며, 김일성 사망 이후 조총련의 '이탈'과 조직 약화 경향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조총련 변화의 요인은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 나타난 현상들을 단순 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변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반면 그 제약 요인 역시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북한과 조총련의 관계

는 매우 역사깊은 것이며 최근 북한의 경제난이 조총련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들은 과거 북한의 지원에 대한 '고마움'을 상기하고 있다.

요컨대,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과 조총련의 관계에 큰 변화라도 일어나고 있는 듯한 보도는 북한과 조총련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난점을 제공할 소지가 다분하다.

최근 조총련의 간부직에서 물러난 한 인사는 "총련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결력은 민단보다 훨씬 강하다"면서 앞으로 허종만 체제의 향방을 관심있게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고 상호 화해 및 교류 협력을 실현함으로써, 재일교포 사회를 분단시키거나 생활의 장애를 초래하는 이데올로기적인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조총련과 민단의 공동 행사 개최 등 화해 분위기가 남북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